

북한인권법의 사문화(死文化),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양식 있는 국민에게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호소한다

- 일 시 : 2023. 12. 26.(화) 11:30
- 장 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1. 북한의 심각한 식량권 침해로 굶주려 죽어가는 주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총회는 지난 19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 2014년부터 10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 북한 최고지도부에 의한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위해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그러나 막상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해야 할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7년 넘게 사문화(死文化)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처음부터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밖에도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권이 귀순어민 2명을 강제북송했고, 2020년 9월에는 서해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건을 자진 월북 사건으로 조작했으며, 12월에는 위헌인 대북전단금지법의 제정을 강행하여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또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등 수없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격하였다.
3.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인권적 활동은 헌법상 정당의 해산사유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헌성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이에 매주 화요집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정상 이행을 촉구해오던 우리는 지난 3월 2일 북한인권법 통과 7주년을 맞은 제200차 화요집회에서 민주당이 계속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불응한다면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4.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채 2024년 총선에서 다시 후보자를 대거 추천하려고 하는바, 더이상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여 국격을 떨어뜨리고 통일미래를 망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양식 있는 국민에게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투표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호소한다.

2023. 12. 25.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 올바른 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 시민모임(올인모) ·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 NK감금피해자 가족회